

2019년 2월 23일 시행 / 2019년 서울시 1차 9급 필기시험

## 사회 기출해설

해설 - 전재홍 교수(종로공무원학원)

1. 다음은 자료수집방법 A~D를 분류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단, A~D는 각각 질문지법, 면접법, 실험법, 참여 관찰법 중 하나이다.)

구분		조작적 정의의 과정을 거치는 연구방법에서 주로 쓰는가?	
		예	아니오
(가)	예	A	B
	아니오	C	D

- ① (가)가 ‘조사대상자와 연구자 간 신뢰관계가 중요한가?’라면, B는 인위적으로 통제된 상황에서 변수의 효과를 관찰하는 자료수집방법이다.
- ② (가)가 ‘연구자가 현상이 실제로 발생한 현지에 가서 연구해야 하는가?’라면 A는 대규모 집단을 대상으로 계량화된 자료를 수집하는 자료수집방법이다.
- ③ (가)가 ‘시·공간의 제약을 극복할 수 있는가?’라면 B는 면대면 대화를 통해 깊이 있는 정보를 수집하는 자료 수집방법이다.
- ④ (가)가 ‘언어적 상호 작용에 의한 자료 수집이 필수적인가?’라면 D는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연구대상의 행동을 관찰하는 자료수집방법이다.

### 1. 정답 ④

해설

① 틀렸다. 조사대상자와 연구자 간 신뢰관계가 중요한 자료수집방법은 면접법(B)이다. 면접법은 신뢰관계 형성을 통해 응답 거부나 회피, 무성의한 응답을 방지하는 장점이 있다.

인위적으로 통제된 상황에서 변수의 효과를 관찰하는 자료수집방법은 실험법이다. 그런데 실험법과 같은 양적 자료수집방법은 조작적 정의의 과정을 거치는 연구방법을 사용하고, 조사대상자와 연구자 간 신뢰관계가 불필요하므로 실험법은 A에 해당한다.

② 틀렸다. 연구자가 현지에 가서 연구하는 자료수집방법은 참여 관찰법이다. 그런데 참여 관찰법은 질적 자료수집방법을 사용하므로, 양적 자료수집방법에서 쓰는 조작적 정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다. 참여 관찰법은 B에 해당한다.

대규모 집단을 대상으로 계량화된 자료를 수집하는 자료수집방법은 양적자료수집방법 중 질문지법(C)이다.

③ 틀렸다. 문헌연구법은 시간과 장소의 제약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롭다는 장점이 있다.

문헌 연구법은 양적 문헌과 질적 문헌에 따라서 각각 쓰이는 자료 수집 방법이 좀 다르다. 양적 문헌 같은 경우는 통계 자료로 이루어진 수치화, 계량화된 문헌을 의미하고. 질적 문헌의 경우에는 일기나 낙서와 같이 수치화되지 않은 비공식적 자료들을 의미한다. 따라서 양적 문헌을 사용할 때는 주로 실증적 연구 방법을, 질적 문헌을 사용할 때는 해석적 연구방법을 사용한다. 따라서 A, B가 해당될 수 있다.

면대면 대화를 통해 깊이 있는 정보를 수집하는 자료수집방법은 면접법(D)이다. 면접법은 직접 얼굴을 마주보고 대화를 통해 정보를 수집하므로 시간과 장소의 제약을 받는다.

④ 맞다. 언어적 상호 작용에 의한 자료 수집이 필수적인 것은 질문지법과 면접법이 있다. 그런데 문제에서 D를 물어봤고 D는 언어적 상호 작용에 의한 자료 수집이 필수적이지 않고, 조작적 정의의 과정을 거치는 연구방법이 아니므로 참여관찰법(D)에 해당하므로 맞는 지문이다.

## 2. <보기>의 밑줄 친 ⑦~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⑦ 기초노령연금은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하는 연금이며, 현재는 기초연금으로 확대 개편되었습니다. ⑩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노령 연금은 가입 기간, 그러니까 연금 보험료 납부 기간이 최소 10년 이상일 때 60세 이상부터 평생 받게 되는 급여입니다. 65세 이하는 소득 활동 정도에 따라 노령 연금 혹은 조기노령연금 지급액이 바뀌는데요, 활동에 따라 감액된 금액을 받게 됨입니다. 소득이 없는 경우는 55세 이상부터 조기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① ⑦은 소득재분배 효과가 나타나며 보편적 복지에 해당한다.
- ② ⑩은 가입자의 비용 부담 능력에 따라 납부하는 금액이 달라진다.
- ③ ⑦은 ⑩과 달리 사전 예방적인 성격을 가지며 선별적 복지에 해당한다.
- ④ ⑩은 ⑦과 달리 사후 처방적인 성격이 강하고 재원을 부담하는 자와 수혜자가 일치하지 않는다.

## 2. 정답 ②

**해설** 기초노령연금(현재는 기초연금)은 공적 부조에 해당하고, 국민연금은 사회보험에 해당한다.

- ① 기초노령연금은 보편적 복지가 아닌 선별적 복지에 해당한다. 보편적 복지란 자격과 조건 없이 요구가 있으면 모든 국민에게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형식이다. 그러나 거둔 세금을 분배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되돌려주기 때문에 소득 재분배 효과가 낮아진다. 선별적 복지는 빈민·저소득층 등 필요한 국민에게만 제한적으로 제공되는 복지 서비스를 말한다. 그러나 국가의 지원이 시급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소득재분배 효과가 보편적 복지에 비해 뛰어나다.
- ③ 사전 예방적인 성격을 띠는 것은 사회 보험에 해당하는 국민연금이다.
- ④ 사후 처방적인 성격이 강한 것은 공적 부조에 해당하는 기초연금이다.

구분	사회 보험	공공 부조	사회 복지 서비스
목적	산업재해, 노령, 질병, 실업 등 미래의 불안에 대처 [사전예방적]	생활 무능력자의 최저 생활 보장 [사후처방적]	사회적 취약 계층의 정상적 사회생활 지원 [사후처방적]
대상	경제적 능력이 있는 모든 국민	경제적 능력이 없는 국민 대상자의 자산 상황 등을 개별적으로 조사	보호가 필요한 사회적 약자
비용	피보험자, 기업주, 국가가 분담 : 공동 부담	국가가 비용 전액 부담 : 국가의 일방적 부담	공공 부문 부담 및 민간 부문의 지원
보상	금전적 보상	금전적 보상	비금전적 보상
특징	강제 가입을 원칙으로 함 능력별 부담 상호 부조의 성격이 강함 소득 재분배 효과 있음 ·근로 의욕의 향상 ·생활 무능력자에게는 무의미	소득 재분배 효과가 큼 국민의 조세 부담 가중 근로 의욕 저하 문제 ·국민의 나태심 유발 우려	국가의 비경제적 지원을 중심으로 함 소득 재분배 효과 없음 사회 보장의 보조적 성격
종류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 급여, 의료 급여, 자활 급여 등) 기초 연금	아동 복지, 노인 복지, 장애인 복지 등

3. 일탈행위에 관한 <보기 1>의 이론에서 제시하는 해결 방안을 <보기 2>에서 가장 옳게 고른 것은?

<보기 1>

성인들이 학교 부적응 학생들을 문제아로 규정하고, 그 아이들을 사랑으로 감싸주지 않기 때문에 이들이 학교 폭력의 가해자나 피해자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기 2>

- ㄱ. 사회적 규범의 통제력 회복
- ㄴ. 정상적인 집단과의 교류 추진
- ㄷ. 타인에 대한 신중한 낙인 필요
- ㄹ. 일탈자로 규정되는 과정과 일탈의 상대성을 강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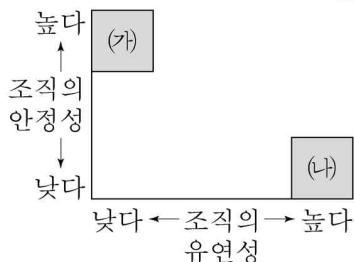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ㄷ, ㄹ

3. 정답 ④

해설 <보기 1>은 낙인이론이다.

- ㄱ. 사회적 규범의 통제력 회복은 아노미 이론의 해결 방안에 해당한다.
- ㄴ. 정상적인 집단과의 교류 추진은 차별교체이론의 해결 방안에 해당한다.

4. <보기>의 (가)와 (나)에 해당하는 사회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가)와 (나)는 모두 효율성을 중요시 여긴다.
- ② (나)는 조직 내 지위가 권한과 책임에 따라 서열화 되어 있다.
- ③ (가)는 다품종 소량생산 체제에 적합한 사회조직이다.
- ④ (나)는 (가)보다 연공서열에 따른 보상체계가 이루어진다.

4. 정답 ①

해설 (가)는 관료제 조직이고, (나)는 탈관료제 조직이다.

- ① 관료제 조직, 탈관료제 조직 모두 조직의 효율성을 중요시 여긴다.
- ②, ④는 관료제 조직의 특징이다.
- ③은 탈관료제 조직의 특징이다.

## 5. 개인과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에 관한 <보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가) 선거에서 후보자를 선택할 때는 소속 정당을 봐야 해. 어떤 후보가 되더라도 정당의 결정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
- (나) 후보자의 소속 정당보다는 후보자 개인의 능력이나 품성이 중요하지. 훌륭한 인물이 대표가 되면 정당의 발전도 가능해.

- ① (가)의 관점은 사회의 합은 개인의 합보다 크다고 본다.
- ② (나)의 관점에서는 사회는 실재하며 개인에게 지속적인 영향력을 미친다고 본다.
- ③ (가)의 관점은 (나)의 관점과는 달리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개인의 의식개혁에 중점을 둔다.
- ④ (나)의 관점은 (가)의 관점과 달리 사회를 생물유기체에 비유하며 개인의 자율성을 중시한다.

### 5. 정답 ①

**해설** (가)는 사회실재론이다. (나)는 사회명목론이다.

- ②, ④는 사회실재론의 내용에 해당한다.  
③은 사회명목론의 내용에 해당한다.

## 6. <보기>의 이론에 대해 가장 옳게 설명한 것은?

- 이븐 할둔(Ibn Khaldoun)은 이슬람 문명의 흥망성쇠에 관심을 갖고 여러 나라의 흥망사를 비교 설명하면서 사회 변화나 문화 현상은 유기체의 일생처럼 성장과 쇠퇴를 되풀이한다고 주장하였다.

- ① 과거 역사 속에서 반복되는 사회 변동을 설명하고 해석하는 데 유용하다.
- ② 문화 상대주의를 부정하고 서구 사회의 지배를 정당화 한다.
- ③ 변동은 곧 진보를 의미한다고 본다.
- ④ 사회 발전은 변동 속도의 차이는 있지만 일정한 방향으로 변화한다고 주장한다.

### 6. 정답 ①

**해설** 보기는 사회변동론 중 순환론을 설명하고 있다. ②, ③, ④는 진화론의 내용이다.

## 7. <보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갑(甲)은 A주택의 소유자이다.
- 갑(甲) - 2017년 2월 15일 A주택에 대해 B은행에 3억 원 근저당을 설정함.
  - 갑(甲) - 2017년 10월 2일 A주택에 대해 을(乙)과 2억 원에 전세 계약을 함.
  - 을(乙) - 2017년 12월 2일 A주택에 입주하고 전입신고를 하면서 확정일자를 받음.
  - 갑(甲) - 2018년 1월 10일 A주택에 대해 C은행에 2억 원의 근저당을 설정함.

- ① 을(乙)의 A주택 전입신고 기록은 등기부 등본 갑구에 기록된다.
- ② A주택 등기부 등본 을구에는 B은행과 C은행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
- ③ A주택이 경매될 경우 을(乙)은 B은행에 우선하여 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
- ④ 갑(甲)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다면 B은행은 A주택을 직접 사용, 수익할 수 있다.

## 7. 정답 ②

해설 ① 주택 전입신고 기록은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에 기록된다. ③ A주택이 경매될 경우 을(乙)은 선순위 저당권자인 B은행에 우선할 수는 없고, 후순위 저당권자인 C은행에 우선한다. ④ 갑(甲)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다면 B은행은 A주택을 경매 신청하여 경매대금으로 채무 변제를 할 수 있을 뿐, 그 주택을 직접 사용, 수익할 수는 없다.

## 8. <보기>에 제시된 헌법 조항에 나타난 민주 정치의 기본 원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제1조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40조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제41조 ① 국회는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제66조 ④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제101조 ①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 |            |             |
|------------|-------------|
| ① 국민주권의 원리 | ② 대의제의 원리   |
| ③ 권리분립의 원리 | ④ 지방 자치의 원리 |

## 8. 정답 ④

해설 헌법 제1조 ②항은 국민주권의 원리, 제40조, 제66조 ④항, 제101조 ①항은 권리분립의 원리, 제41조 ①항은 대의제의 원리를 나타내고 있다.

## 9. <보기>는 우리나라의 외환 시장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다. (가)~(라)의 현상이 독립적으로 나타났을 때 갑(甲)국 국민의 생활 모습에 대한 추론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단, 제시된 것 외에 다른 경제적 요인에는 변화가 없으며, 모든 거래는 달러로 이루어진다고 가정한다.)

- |   |
|---|
| (가) 국가 신용도 하락으로 외국인의 국내 투자가 지난해의 1/3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
| (나) 국내 조류 독감 파동으로 달걀과 달걀 가공품의 수입이 지난해보다 5배 증가하였다. |
| (다) 한류의 영향으로 문화 예술 저작권의 해외 판매액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
| (라) 국민 총소득의 감소로 해외 상품에 대한 1인당 지출이 감소하였다.          |

- |   |
|---|
| ① (가), (나) 현상이 동시에 나타나면 우리나라의 경상수지는 일시적으로 개선된다.       |
| ② (나), (다) 현상이 동시에 나타나면 우리 정부의 외채 상환 부담을 증가시킨다.       |
| ③ (다), (라) 현상이 동시에 나타나면 미국으로 수출하는 재화의 가격 경쟁력은 낮아진다.   |
| ④ (가)와 (다)는 외환의 공급 측면에, (나)와 (라)는 외환의 수요 측면에 영향을 미친다. |

## 9. 정답 ②

해설 (가) 외국인의 국내 투자 감소는 외화공급곡선의 좌측 이동 요인이다. (나) 수입 증가는 외화수요곡선의 우측 이동 요인이다. (다) 문화 예술 저작권의 해외 판매 증가는 수출 증가에 해당하고 수출 증가는 외화공급곡선의 우측 이동 요인이다. (라) 국민 총소득의 감소로 해외 상품에 대한 1인당 지출이 감소하였다며 수입 감소에 해당하고 수입 감소는 외화수요곡선의 좌측 이동 요인이다.

① 맞다. (가) 외화공급곡선의 좌측 이동과 (나) 외화수요곡선의 우측 이동 현상이 동시에 나타나면 환율이 인상되어 한국제품의 달러표시가격 하락하므로 수출 증가되고, 미국제품의 원화표시가격 상승으로 수입 감소를 가져와 경상 수지가 흑자로 돌아서게 되므로 경상수지가 개선된다.

- ② 틀렸다. (나) 외화수요곡선의 우측 이동과 (다) 외화공급곡선의 우측 이동 현상이 동시에 나타나면 환율의 인상·인하 여부는 알 수 없으므로 우리 정부의 외채 상환 부담을 증가시킨다고 단정 지을 수 없다. (외화수요곡선의 우측 이동폭과 외화공급곡선의 우측 이동 폭에 따라 환율의 인상·인하 여부가 결정된다)
- ③ 맞다. (다) 외화공급곡선의 우측 이동과 (라) 외화수요곡선의 좌측 이동 현상이 동시에 나타나면 환율이 인하되어 한국제품의 달러표시가격이 상승하므로 미국으로 수출하는 재화의 가격 경쟁력은 낮아진다.
- ④ 맞다.

#### 10. <보기>에서 국제 관습법으로 가장 옳게 둑인 것은?

- ㄱ. 신법 우선의 원칙
- ㄴ. 외교관 면책 특권
- ㄷ. 국내 문제 불간섭 원칙
- ㄹ. 권리 남용 금지의 원칙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 10. 정답 ③

**해설** ㄴ. 외교관 면책 특권, ㄷ. 국내 문제 불간섭 원칙은 국제 관습법의 사례이다.

국제관습법은 국가들 간의 묵시적 합의(불문법)로서 법적 구속력을 가진 국제관행이다. 조약과 함께 국제법을 구성한다. 국제관습법의 예로는 외교관의 면책특권, 내정 불간섭의 원칙, 포로에 대한 인도적 대우, 정치범 불인도의 원칙, 민족자결의 원칙, 조약준수의 원칙, 집단학살금지의 원칙 등이 있다. ㄱ. 신법 우선의 원칙, ㄹ. 권리 남용 금지의 원칙은 법의 일반 원칙의 사례이다. 법의 일반 원칙은 국가들에 의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원칙으로서 신의 성실의 원칙, 권리 남용 금지의 원칙, 손해 배상 책임의 원칙 등이 있다.

#### 11. <보기>의 (가)~(다) 제도가 공통적으로 보장하고자 하는 기본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가) 생계 곤란 가구에 최저 생계비 지원
- (나) 집행유예 중인 자에게도 선거권 부여
- (다) 선거구 간 인구 편차를 2 : 1까지로 제한

- ① 다른 기본권 보장을 위한 수단적 권리이다.
- ②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권이다.
- ③ 가장 고전적인 권리로서 방어적 성격의 권리이다.
- ④ 신분, 성별, 재산 등의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이다.

#### 11. 정답 ④

**해설** 보기의 제도가 공통적으로 보장하고자 하는 기본권은 평등권이다.

(가) 생계 곤란 가구에 최저 생계비 지원 ; 사회권(생존권) 중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행복추구권, 평등권  
 보건복지부장관이 2002년도 최저생계비를 고시함에 있어 장애로 인한 추가지출비용을 반영한 별도의 최저생계비를 결정하지 않은 채 가구별 인원수만을 기준으로 최저생계비를 결정한 2002년도 최저생계비고시가 생활능력 없는 장애인가구 구성원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평등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소극) [2002현마328]

(4) 집행유예 중인 자에게도 선거권 부여 : 선거권, 평등권

집행유예자는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거나 취소되지 않는 한 교정시설에 구금되지 않고 일 반인과 동일한 사회생활을 하고 있으므로, 그들의 선거권을 제한해야 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들의 선거권을 침해하고, 보통선거원칙에 위반하여 집행유예자와 수형자를 차별취급하는 것이므로 평등원칙에도 어긋난다. [2012헌마409 등]

(5) 선거구 간 인구 편차를 2 대 1까지로 제한 : 평등선거에 위배

헌법재판소가 국회의원 선거구의 최대·최소 인구 비례를 2대1 이하로 줄이도록 한 것은 지금의 지나친 선거구별 인구 편차가 헌법이 보장한 투표의 평등 원칙을 침해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 ① 다른 기본권 보장을 위한 수단적 권리인 청구권적 기본권이다.
- ②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권은 사회적 기본권이다.
- ③ 가장 고전적인 권리로서 방어적 성격의 권리인 자유권적 기본권이다.

## 12. <보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갑(甲, 20세)은 A사에 계약직으로 취업한 지 1년이 넘었다. 팀장이 바뀌면서 인사 평가 점수가 낮으니 회계 담당이던 갑(甲)에게 영업 업무까지 맡으라고 강요했다. 제안을 거절하면 정직원 전환이 안 될 것이라는 말을 듣고 억지로 일을 맡게 되었다. 그 후 갑(甲)은 영업 실적이 부족하고 업무 수행이 태만하다는 이유로 문자 메시지로 해고 통보를 받았다.

- ① A사의 해고 처분은 사유는 부당하나 절차상 하자는 없다.
- ② 갑(甲)은 부당해고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심판결과가 나오기 전에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 ③ A사의 노동조합은 갑(甲)에 대한 부당해고를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A사를 제소할 수 있다.
- ④ 갑(甲)이 부당해고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12. 정답 ②

**해설** ①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고, 해고는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한 해고통지는 무효이다. 즉, 해고사유가 정당하다 해도 문자 메시지로 해고 통보를 받았다면 절차상 하자가 생긴 것으로 무효이다. ② 맞다. 근로자 갑(甲)은 지방 노동위원회와 중앙 노동위원회의 구제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곧바로 해고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③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항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 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항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④ 갑(甲)이 부당해고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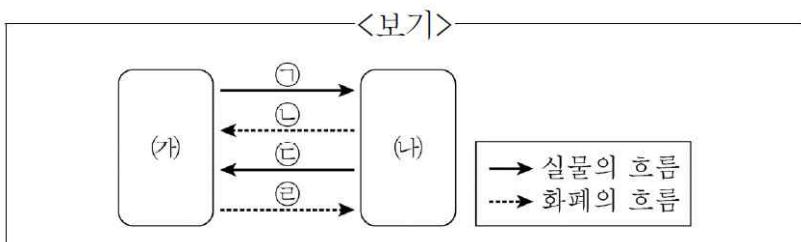
### 13. <보기>의 밑줄 친 ①~④ 중 가장 옳은 것은?

발표 학생 :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 법률 개정 절차입니다. 우리나라는 ① 국회 재적의원과 반수 또는 대통령이 법률안을 발의할 수 있습니다. ② 발의된 법률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검토한 후 국회의장에게 제출되고, 국회의장이 문제가 있는지 검토 후 법제 사법위원회에서 자구, 체계 등을 심사하도록 합니다. 법제 사법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법률안은 본회의에 상정 되어 ③ 재적의원과 반수가 출석하고, 출석 의원과 반수가 찬성하면 의결됩니다.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④ 대통령이 이의서를 붙여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된 법률안은 이의서를 반영하여 수정하고 재상정됩니다.

### 13. 정답 ③

해설 ① 법률안 발의는 국회 재적의원 10인 이상, 상임위원회, 정부가 할 수 있다. ② 발의된 법률안은 국회의장에게 제출→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검토→법제 사법위원회에서 자구, 체계 등을 심사→본회의에 상정된다. ③ 맞다. 본회의에서 법률안 개정 의결정족수는 재적의원과 반수가 출석하고, 출석 의원과 반수가 찬성하면 의결된다. ④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대통령이 거부할 수 있으나, 환부 거부(전부 거부)만 가능할 뿐이고, 미국과 달리 일부 거부, 수정 거부, 보류 거부는 인정되지 않는다.

### 14. <보기>는 민간 경제의 흐름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단, Ⓐ), (Ⓑ)는 민간 경제 주체에 해당한다.)



- ① (가)가 가계이면, ⑦은 재화이다.
- ② (나)가 기업이면, ⑧은 서비스의 대가이다.
- ③ ⑪이 생산요소이면, (가)는 이윤의 극대화를 추구한다.
- ④ ⑫이 생산요소의 대가이면, (나)는 생산물 시장의 공급자이다.

### 14. 정답 ③

해설 ① (가)가 가계이면, ⑦은 토지, 노동, 자본, 경영이다. ② (나)가 기업이면, ⑧은 토지, 노동, 자본, 경영의 대가인 지대, 임금, 이자, 이윤이다. ③ 맞다. ⑪이 생산요소이면, (가)는 생산요소를 수요하는 기업이므로 이윤의 극대화를 추구한다. ④ ⑫이 생산요소의 대가이면, (나)는 생산물 시장의 수요자인 가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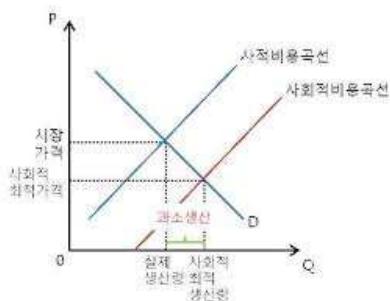
### 15. <보기>는 생산측면에서 외부효과가 발생한 A재의 시장 상황을 보여준다. 이에 대한 분석 및 추론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단위 : 개, 원)	
<사회적 최적수준>		<현재 시장 균형>	
사회적 최적 생산량	80	시장 균형 생산량	50
최적 가격	100	시장 균형 가격	⑦

- ① ⑦은 100보다 작다.
- ② 외부 불경제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 ③ 사적 비용이 사회적 비용보다 작을 때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
- ④ 정부가 생산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여 상황을 개선 할 수 있다.

### 15. 정답 ④

해설 사회적 최적 생산량(80)보다 시장 균형 생산량(50)이 더 작으므로 생산의 외부경제가 나타나고 있다.



- ① 사회적 최적 가격(100)보다 시장 균형 가격(⑦)은 더 커야 한다.
- ② 생산에 있어서 외부 경제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 ③ 사적 비용이 사회적 비용보다 클 때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
- ④ 맞다. 외부 경제의 경우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여 상황을 개선 할 수 있다.

### 16. <보기>에 대한 분석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단, 갑(甲), 을(乙)국의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탄력적, 비탄력적 중 하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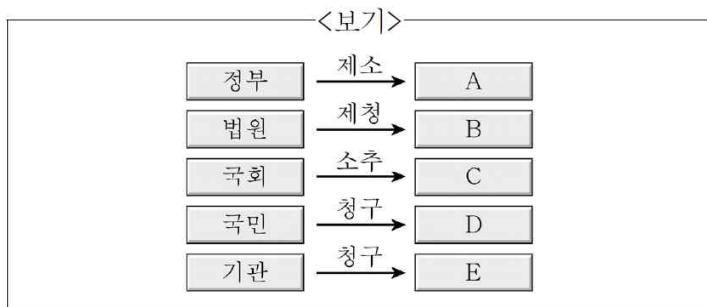
A제품에 대한 국가별 시장 조사 결과		
구분	갑(甲)국	을(乙)국
현재 판매량	1,000개	500개
원화로 환산한 현재 가격	1만원	1만원
필수재로 인식하는 소비자의 비율	높다	낮다
가계의 소비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작다	크다

- ① A제품을 판매하는 기업은 갑(甲)국에서는 가격을 내리는 전략을 통해 기업의 판매 수입을 극대화할 것이다.
- ② 을(乙)국에서 A제품의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0보다 크고 1보단 작을 것이다.
- ③ A제품의 가격이 변화할 때 갑(甲)국의 수요량은 을(乙)국의 수요량보다 덜 민감하게 나타난다.
- ④ A제품은 을(乙)국보다 갑(甲)국에서 대체재가 더 많을 것이다.

### 16. 정답 ③

해설 갑(甲)국에서 A제품의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비탄력적이다. 그 이유는 많은 소비자들이 갑(甲)국에서 A제품을 필수재로 인식하고 있고, 가계의 소비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으므로 가격 변동에 비해 수요량 변동이 더 작다. 을(乙)국은 그 반대이므로 을(乙)국에서 A제품의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탄력적이다. ① 비탄력적인 제품은 가격을 인상하는 것이 기업의 총판매수입을 증가시킨다. 따라서 A제품을 판매하는 기업은 갑(甲)국에서는 가격을 올리는 전략을 통해 기업의 판매 수입을 극대화할 것이다. ② 을(乙)국에서 A제품의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탄력적이다. 따라서 을(乙)국에서 A제품의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1보다 클 것이다. ③ 맞다.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가격이 변화할 때 수요량이 변화하는 정도를 의미하고 갑(甲)국에서 A제품의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비탄력적이므로 A제품의 가격이 변화할 때 갑(甲)국의 수요량은 을(乙)국의 수요량보다 덜 민감하게 나타난다. ④ A제품을 필수재로 인식하는 소비자의 비율이 낮은 을(乙)국에서 대체재가 더 많을 것이다.

### 17. <보기>의 헌법재판소의 권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D의 경우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과 위헌 심사형 헌법소원이 있다.
- ② C의 결정의 효력은 당사자를 공직으로부터 파면하며,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이 면제된다.
- ③ A, B에 해당하는 사건의 경우 헌법 재판관 6명 이상의 출석과 5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 ④ E에 해당하는 것은 위헌 정당 해산 심판이다.

### 17. 정답 ①

해설 A는 위헌정당해산심판, B는 위헌법률심판, C는 탄핵심판, D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과 위헌 심사형 헌법소원, E는 권한쟁의심판이다. ② 탄핵심판(C) 결정의 효력은 당사자를 공직으로부터 파면하지만, 민형사상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③ A, B에 해당하는 사건의 경우 헌법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과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권한쟁의심판은 헌법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과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요한다. ④ E에 해당하는 것은 권한쟁의심판이다.

### 18. <보기>는 갑(甲)국의 경상수지 자료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단, 국제 거래는 갑국과 을국 사이에서만 발생하고 제시된 자료 이외의 거래는 없다.)

	(단위 : 억 달러)	
	2017년	2018년
상품수지	30	20
서비스수지	-20	-30
본원소득수지	-15	10

이전소득수지	10	-5
--------	----	----

- ① 2018년 갑(甲)국의 상품 수출액은 2017년에 비해 감소하였다.  
 ② 2018년 경상수지는 을(乙)국 화폐 대비 갑(甲)국 화폐 가치가 상승하는 요인이다.  
 ③ 2017년과 달리 2018년 갑(甲)국의 경상수지는 외환 보유액이 증가하는 요인이다.  
 ④ 2018년 경상수지는 갑(甲)국에서는 물가 하락을, 을(乙)국에서는 물가 상승을 유발한다.

### 18. 정답 ④

**해설** 갑(甲)국은 2017년 경상수지는 5억달러로 흑자이고, 2018년 경상수지는 -5억달러로 적자이다. ① 2018년 갑(甲)국의 상품 수출액은 2017년에 비해 감소하였는지 증가하였는지 알 수 없다. ② 갑(甲)국의 2018년 경상수지 적자는 외화 유입보다 외화 유출이 더 크므로, 을(乙)국 화폐 대비 갑(甲)국의 갑국 화폐 가치가 하락(환율 인상)하는 요인이다. ③ 2017년과 달리 2018년 갑(甲)국의 경상수지는 적자이므로 외환 보유액이 감소하는 요인이다. ④ 2018년 갑(甲)국의 경상수지 적자는 을(乙)국에서는 경상수지 흑자이다. 을(乙)국은 경상수지 흑자로 외화 유입이 증가하고 외화는 모두 을(乙)국의 통화로 바뀐다고 가정하면 을(乙)국은 물가 상승(인플레이션)을 유발한다. 갑(甲)국은 그 반대이다.

### 19. <보기 1>의 밀줄 친 ㉠, ㉡ 기관이 추진할 정책에 대한 내용을 가장 옳게 추론한 것을 <보기 2>에서 모두 고른 것은?

#### <보기 1>

정부가 올해 하반기 우리 경제 상황을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소비가 더디게 회복되고 고용 증가세도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와 ㉡중앙은행은 여러 대책을 고민하고 있다.

#### <보기 2>

- ㄱ. ㉠은 세율을 인하하여 가계의 처분가능 소득을 감소시킬 것이다.
- ㄴ. ㉡은 채권시장에서 국·공채를 매입할 것이다.
- ㄷ. ㉠과 ㉡은 총수요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것이다.
- ㄹ. ㉠은 통화 정책, ㉡은 재정 정책으로 경기 안정화에 나설 것이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 19. 정답 ③

**해설** 정부는 재정정책 수단으로 조세정책과 정부지출정책을 사용하고, 중앙은행은 금융정책(통화정책) 수단으로 자금준비율정책, 공개시장조작정책, 재할인율정책을 사용한다.

ㄱ. 정부(㉠)는 세율을 인하하여 가계의 처분가능 소득을 증가시켜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확장 재정정책을 펼칠 것이다. ㄹ. 정부(㉠)는 재정 정책, 중앙은행(㉡)은 통화 정책으로 경기 안정화에 나설 것이다.  
 ㄴ. 맞다. 중앙은행(㉡)은 채권시장에서 국·공채를 매입함으로서 시중에 통화량을 증가시켜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확장 금융정책을 펼칠 것이다. ㄷ. 맞다. 정부(㉠)와 중앙은행(㉡)은 총수요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것이다.

## 20. <보기>에 해당하는 경제적 유인과 성격이 가장 유사한 것은?

19세기 영국에서는 무거운 죄를 지은 사람들을 호주로 유배를 보내는 것이 관례였는데, 호송 도중 죄수들이 사망하는 문제가 자주 발생했다. 영국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송 범죄자의 수에 비례하여 비용을 지급하는 방식에서 이송이 끝났을 때까지 살아남은 죄수들의 수에 비례하여 비용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꾸었다. 이후 호송 도중 죄수들이 사망하는 문제는 크게 줄어들었다.

- |           |             |
|-----------|-------------|
| ① 특허권     | ② 환경 오염세    |
| ③ 쓰레기 종량제 | ④ 전력 요금 누진제 |

### 20. 정답 ①

#### 해설

보기는 긍정적 경제적 유인에 해당하는 내용으로서 특허권이 여기에 해당한다. ②, ③, ④는 부정적 경제적 유인에 해당하는 사례이다.

\* 경제적 유인(incentive)

#### 1. 의미

사람들이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것을 유인이라고 하는데, 유인 가운데 금전적인 보상 또는 벌금 등 돈과 관련된 것이 경제적 유인이다.

#### 2. 종류

① 긍정적 경제적 유인 : 보상이나 이득처럼 편익이 증가하여 어떤 행위를 더 하게 하는 유인

ex) 상금, 장학금, 포상금, 보조금, 특허권 등

② 부정적 경제적 유인 : 벌금이나 손실처럼 비용이 증가하여 어떤 행위를 덜하게 하는 유인

ex) 과태료, 벌금, 쓰레기 종량제, 전력 요금 누진제, 오염 배출권 거래제 등

#### 3. 효과

경제적 유인은 사람들의 선택에 영향을 줌, 따라서 경제적 유인은 경제 주체들의 선택에 의해 작동되는 시장 경제의 원동력이 된다.

ex) 유가 상승 → 자가용 승용차 출퇴근 감소, 대중교통 이용 증가, 연비가 좋은 자동차 구매 → 버스 회사 운행 증가, 자동차 회사 연비가 좋은 차량 생산

#### 4. 한계

① 사람들은 금전적 동기에 불과한 경제적 유인에 반응하지 않을 때도 있다.

ex) 자원봉사

② 경제적 유인의 시행 취지에 어긋나는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나기도 한다.

ex) 어린이집에서 아이를 늦게 데리러 오는 학부모들 때문에 지각비를 걷자 오히려 지각하는 학부모들이 늘어나는 경우.